

과거로 미래 만들기

백영서 지음,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나남출판, 2022)을 읽고

육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전공 조교수

I. ‘인도-태평양’의 부상

2023년 이 서평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최근 행보를 한 번 따라가 보자. 일본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일 단독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총리는 인도양의 핵심 국가인 인도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이와 같은 행보가 지향하는 바는 명백했다. 이제 일본은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을 연결하는 해양국가로 자기를 규정하고자 했다. 이는 섬나라로서 해양이 지정학적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일본의 자기 확인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수식어는 명실상부하게 ‘비자유주의적’인 국가들, 특히 중국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발 개념인 ‘인도-태평양’은 부상하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략적 견제와 맞물리면서, 국제정치적으로 공식 시민권을 얻었으며 이는 일본-인도-호주-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느슨한 조직체인 ‘쿼드(Quad)’로 구현되기에 이르렀다.

인도 방문을 마친 후, 기시다 총리는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날, 모스크바에서는 시진핑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의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각자 어느 편에 가까이 서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했다. 어쩌면 후대의 호사가들은 모스크바의 시진핑과 키이우의 기시다가 각각 서 있는 장면을 인도-태평양을 주축으로 한 ‘해양’ 세력과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대륙’ 세력의 단층선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한반도 정세도 엄중하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규정했고, “북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이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로 연결된 한국-미국-일본의 협력 노선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외교적으로는 북방축과 남방축을 중시하면서, 일본과 거리를 유지해 온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으로부터의 노선 전환을 의미했다. 앞으로의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정책과 일본발 ‘인도-태평양’ 전략은 서로 포개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I. 한국의 사상자원으로서 동아시아담론 위치 짓기

흔히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국-중국의 대립과 이와 맞물린 향후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논하는 것은 이 서평의 주제와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작금의 정세를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인인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상상이 최근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인도-태평양’이 국제정치에서 지분을 차지하고, ‘신냉전’이라는 말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라는 오래된 지정학이 화려하게 귀환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담론은 빠르게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실 한국 지성계에서 동아시아가 활발히 논의되었던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일종의 예외적 시간대였을지도 모른다. ‘신냉전’이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는 탈(脫)-탈냉전을 경험하는 속에서 우리는 동아시아가 경험했던 탈냉전의 역사화와 그 의미를 차분하게 따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매우 시의적절하게도, 이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작년 우리 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의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의 흐름을 대표하는 백영서의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대안체제의 길』이 바로 그 책이다. 어쩌면 앞서 소개한 작금의 변화가 저자의 집필을 추동한 직접적인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 백영서는 “아직도 동아시아담론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도 동아시아다”(290쪽, 이하 쪽수 숫자만 표기)라고 답하고 있다. 질문하는 이의 ‘아직도’는 동아시아가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 맥락이 크게 바뀌었기에 담론의 의의가 사라졌으며, 결국 백영서가 말하는 동아시아담론도 다른 한국의 여러 지적 담론들처럼 일종의 유행에 불과했다는 핀잔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다소 짓궂은 질문에 백영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에 힘입어 동아시아담론이 내실을 갖추 수 있던 역사적 상황과 조건이 최근 바뀌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286). 그러나 담론이 논의될 수 있는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담론은 일시적인 지적 유행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백영서가 이 책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백영서가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정수(精髓)로 꼽는 것은 한국-동아시아-세계라는 중층적 공간인식이며, 이와 같은 사고틀은 세계질서와의 만남 속에서 동아시아 속 한국의 위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직도 동아시아담론이냐는 질문에 대해 백영서는, 과거에도 동아시아였고, 지금도 동아시아이며,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논의를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

물론 각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한국인들이 발신한 동아시아담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의 수준은 달랐지만, 백영서는 자신이 속한 비판적 동아시아담론 역시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의 소산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장소의 기운’(289)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비판적 동아시아담론 역시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이 그러했듯이 늘 그 시대가 요구하는 답에 실천적인 답을 제시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유연한 정의를 시도한다.

이 책의 제1부 「동아시아담론이 온 길: 대안체제론을 중심으로」는 한국의 사상자원으로서 동아시아담론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제1부의 서사적 특징은 담론 생산자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요약·정리하고 한국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담론의 계보를 위치 짓고 재맥락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역사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서술은 한국 지성계의 풍경에서 그리 익숙한 장면이 아니다. 아마도 자화자찬과 자기비판 사이에서 서술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지식과 사상이 그야말로 유행에 맞추어 시시각각 바뀌는 한국 지성계의 풍경 속에서 담론 생산자(혹은 유통자)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이 책에서 백영서가 서술하고 있는 서사 전략은 유행 속에서 성행했다가 급속도로 몰락해 가는 한국 지성계의 일반적인 양상을 동아시아담론이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부터, 한반도와 동아시아 현실에 직핍(直逼)하면서도 단순한 정세진단을 넘어서 문명차원의 전환을 고민한 여러 잡지(『개벽』, 『사상계』, 『청백』, 『창비』)의 동아시아담론을 정세론과 문명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시도하고 있는 글쓰기 전략이 백영서라는 개인의 관점, 혹은 그가 속해 활동하고 있는 창비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밋밋한 정리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의미 있는 서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상상력과 곡예 기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III. ‘오픈 소스’로서의 동아시아담론

특히 본 서평이 주목하는 이 책의 서사 전략은 제2부 「동아시아담론이 갈 길: 미시적 분석」에서 소개된 저자 자신의 경험과 동아시아담론이 형성된 미시적 맥락이다. 백영서의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이 생산되는 지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 있다. 흔히 담론 생

산자들은 지식 생산과정에서 참고한 참조체계(reference)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참조체계를 감춘다. 이는 결과물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글쓰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지식 생산과정에서 당연히 참조했을 여러 텍스트의 관계와, 텍스트의 배경을 규명하는 일은 담론 생산자의 작업이 아니라, 후대 사상사 연구자의 작업으로 남는다.

기실 많은 사상사 연구자들이 잘 밝히고 있듯이 모든 사상과 담론은 시공간의 산물이다. 담론 생산자는 당연히 기존의 지식 체계와의 지적 투쟁을 하기도,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서사를 구축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와 같은 서사를 만드는 방식은 서구 지성계를 일종의 지적 ‘표준(canon)’으로 두는 것이다. 때로는 비서구, 탈서구적 지향을 강하게 주창하는 이들이 여설적으로 서구 지성계로부터의 인정받기를 내심 열망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제2부에서 시도된 저자의 자기 서사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담론 생산에서 동아시아 지식인들과의 교류, 연대운동에 참여한 경험(201)을 그 계기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게 일반적인 담론 생산의 경로에서 벗어나 한국과 동아시아의 ‘장소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책에 나오는 일화에 주목해 보자.

1990년 여름 저자는 하버드-옌칭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렀다. 이는 저자의 ‘첫’ 외국 경험이였다. 외국인들은 저자의 중국사 연구성과만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동시대 한국에 대한 관찰을 듣고자 했다. 외국인들의 눈에 저자는 중국사 연구자인 동시에 한국인 혹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이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고백한다(203).

어쩌면 저자가 느낀 이 당혹스러움,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자의 응답은 향후 저자가 걸어갈 길에 대한 예고편이였다. 그때 우연히 들었던 질문은 저자에게 직핍(直逼), 그야말로 ‘바짝’ 다가왔다. 사실 대학원은 엄격한 지적 훈련을 통해 연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길러 낸다는 이유로, 일종의 상징폭력을 주입하는 혹독한 공간이다. 그렇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주체’를 의식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게 아니다. 그렇기에 대체로 연구자들은 저런 질문을 받고도 크게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어느 정도 자신이 설

명할 수 있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을 능숙하게 전하고, 본업인 연구자로 자연스럽게 회귀한다.

반면 저자는 새로운 공간에서 받은 질문을 진지하게 대면하면서 ‘한국인’ 중국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한다. 연구자로서 정체성의 문제는 저자가 중국인으로서 중국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비-중국인인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중국사를 연구했기에 더 절실한 문제였으리라. 저자는 중국사 연구자로서 학문의 대상으로서만 중국사를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사를 바라보는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눈으로서 중국사를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동아시아적 시각’을 고민하는 주체로서 새로이 거듭난다. 이 일화를 굳이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저자 자신이 동아시아담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성찰적 방법론의 모색 과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그에게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들의 집합으로만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동아시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일보다는, 동아시아를 “항상 자기성찰 속에서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의 과정”(205-206)을 중시한다. 즉 각자의 문제의식과 그에 입각한 실천과제에 따라 동아시아는 유동적인 관점에서 늘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적 시각을 통해 저자가 제일 회구했던 바는 ‘자기 안의 동아시아’를 발견하고, 이를 ‘동아시아 속 자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찰적 주체의 등장이었다(206). 동아시아라는 지역 역시 일종의 수단일 따름이다. 동아시아담론에서 동아시아를 택한 이유는 동아시아가 우리에게 가까운 곳이며, 멀리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이유이지, 동아시아 그 자체로서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었다(14).

저자는 동아시아를 유동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실천적 방법과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대표적 관점은 중심-주변 구도였다. 중심과 주변을 고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전파(傳播)의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한다. 그 전파의 과정은 무한한 연쇄(連鎖)다. 연쇄는 전파의 방향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사리 타파할 수 없는 구조의 ‘쇠사슬(鎖)’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역사의 역설은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주변화되어 버린 동아시아인들이 오히려 중심-주변 구도를 강하게 의식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비판하는 논리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중심과 주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중심 안의 주변성, 주변 안의 중심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상상력은 새로운 공간과의 조우를 통해 가능했다. 저자에게 그 공간은 우선 대만과 일본이었다. 저자는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니기도 한 대만의 복잡성, 그리고 대만을 식민지화하기도 했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후발 제국주의를 거친 일본에서 논의되는 여러 착종된 시각을 접촉하며, 세계사적으로 억눌린 주변으로서 동아시아 경험과, 동아시아 내에서 억눌린 주변의 눈을 결합하여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중심과 주변은 지리적으로 결정되거나 고정되는 것이 아닌, 저자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명사’가 아닌 ‘형용사’(210-211)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주변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주변적 시각이 자연스럽게 장착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주변에 있더라도 중심적 시각, 더 정확하게는 중심으로부터의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빈번했다(212). 저자가 생각하는 ‘주변의 시각’은 단순히 중심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주변에 있고 중심으로부터 차별당함을 문제로 삼고, 동시에 자신이 한층 더 주변적 부분을 차별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중심의 문제됨을 다시 묻는 자세에서 기초를 두었다(212). 중심에 존재하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관계에서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주변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시각’은 보편성과 섬세함을 더 갖출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동아시아를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질화하기보다는, 동아시아담론이 다룰 수 있는 동아시아라는 문제군을 ‘탈실체화’하면서, 기존의 동아시아담론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변 지역이나 소수자 문제까지 동아시아담론 속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두었다. 이 갱신 과정은 단순히 백영서 개인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동아시아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동아시아담론이 줄곧 갱신될 수 있었으며, 또 동아시아담론 자체가 처음부터 탈실체화된 ‘오픈 소스’였기에 또 가능할 수 있었다. 지적 교류와 세부적인 갱신과정이 책의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훗날 그 자체로 흥미로운 사상사적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친절한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동아시아담론을 어떻게 자신의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백영서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를 자신의 문제영역에 이를 활용하는 ‘성찰적 주체들’에게 달려 있다. 이는 앞으로 동아시아담론의 생명력에도 연관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담론이 아주 큰 변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해 나가는 ‘이소성대(以小成大)’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IV. 북합국가들의 동아시아를 향해

이 책에서 시도한 저자의 논의는 단순히 지성사 차원의 의미부여로 국한되지 않는다. 저자는 동아시아의 현 정치적 상황이 서로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핵심현장을 중심으로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쉽사리 비관할 필요도 없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냉전’ 담론이 확산되고, 이 속에서 한국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고, 그 안에서 양자택일적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한국 지성계의 풍토 속에서 이와 같은 고민은 매우 소중하다.

저자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과제에서 도출된 ‘북합국가’의 문제의식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는 창비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한반도형 북합국가 모델의 일방적 수출이 아니라, 북합국가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적 문제를 바라본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리고 동아시아 내 북합국가 모색 과정은 상호 학습을 통해 한반도의 북합국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최근 홍콩, 신장, 대만과의 양안 관계에서 보이는 중국의 행보를 두고 중국이 ‘제국형 국민국가’이며 중국이 지닌 제국성을 증명한다고 보는 시각이 신냉전 담론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저자는 현재 갈등이 벌어지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홍콩, 대만 문제가 중국에 존재하는 내부경계(內境)를 상징적으로 보

여 주는 사례라 재해석한다(261). 일시적으로 ‘제국’이 강압적으로 승리한 듯 보여도, 오히려 이를 통해 중국이 단일형 국가로 순조롭게 이행할 수 없고, 복합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 준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또 제국형 국민국가론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폭을 한정 짓는다면, 저자는 ‘제국형 복합국가’로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 국가만의 관점이 아니라, 민간사회의 역할을 폭넓게 중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운영원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262). 한반도의 ‘시민사회 주도형’ 복합국가론의 상상력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관점이 도출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을 ‘제국형 복합국가’로 인식하는 일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은 일이다. 중국 자신도 제국으로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국에 맑스주의를 전파한 리다자오(李大釗)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전환 방법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리다자오는 국가의 자기개조(자치와 민주)와 연방제를 결합한 구상을 선구적으로 논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유연한 거버넌스로 리다자오의 논의를 창조적으로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일이, 천하나 왕도와 같은 유교적 관념을 중심으로 ‘제국형 문명국가’를 건설하려는 최근 중국의 행보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263). 앞으로 중국을 향한 저자의 지적 개입이 이를 수신하는 중국 사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현대 중국이 지닌 무게감은 크지만, 저자는 중국만이 동아시아 질서의 모습을 규정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대만과 오키나와의 자치운동도 중국과 일본의 복합국가화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현장에서 한반도형 복합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특히 저자는 한국에게 중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지나치게 한국의 역량을 낮추어 보는 시각이라 보고, 한국이 중국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물질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 등 일정한 영역에서는 소프트파워를 지닌 어엿한 중견국가가 된 한국의 역할이 어엿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의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생산적 힘(productive power)’으로 제시한다. 생산적 힘은 단순한

K-문화를 수출하는 문화역량이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차원의 대안제시 능력을 의미한다(267). 정세론과 문명론의 결합 속에서 사상과 담론의 형태로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을 살펴본 저자는 이제 한국의 국력과 결합하여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백영서가 언급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 지성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생산적 힘’을 생각하면서, 다시 글 문을 열었던 인도-태평양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사실 일본발 인도-태평양 전략이 현재 쿼드라는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로 귀결된 데에는 한국의 역할도 일정하게 존재했다. 한반도 평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구상이 반중국 동맹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을 엮어 내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정치외교적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상상의 힘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 스스로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냉전기 한국은 늘 동아시아보다는 ‘태평양’이라는 정체성에 관심을 지녀 왔다. 그리고 ‘태평양’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상상이자, 냉전적 상상이기도 했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등장할 때, 아시아에서 이에 상응하는 ‘태평양동맹’을 강하게 주장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나 당대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네루를 중심으로 아시아관계회의(Asian Relations Conference)를 개최하여, 냉전적 선택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관계’를 새로이 수립해야 할지를 논하면서, 탈식민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타국을 식민 지배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제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바 있었다. 인도 네루의 고민은 냉전적 진영 대립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비동맹’의 상상력으로 이어졌다. 백영서의 주권의 재구성과 복합국가론도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관계’의 고민과 연결된다. 이 책 곳곳에 뿌려져 있는 생각의 씨앗들이, 필자를 포함한 다른 학인들을 만나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갱신되기를 마음 속 깊이 희구한다.